

에코시티 · 만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덕진구, 4대 종합대책 추진
쓰레기 수거 · 가로변 청소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공원인수 · 관리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주 시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전주시 덕진구청은 13일 열린 덕진구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도시개발지구인 에코시티·만성지구 주거환경 개선 4대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쓰레기 수거 및 가로변 청소 강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거리질서 유지 ▲공원인수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이다.

먼저, 구는 신도시 내 쓰레기 수거 기동처리반을 운영함으로써 현장민원을 즉시 해소하고, 민원 다발지역 수시점검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에코시티에는 가로청소 근로자를 투입하고, 쓰레기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쓰레기 수거 및 노면청소차 운영으로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구는 1년 365일 광고물티를 운영하고, 주말·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분양·태양광 발전분양 등 무분별하게 난립해있는 불법 현수막을 집중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 다발구역 에어간판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상인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 계고를 통해 단속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나가기로 했다.

셋째, 구는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요청지역인 만성동과 에코시티에는 각 각 1개반의 이동식 단속반이 배치되고, 고정용 CCTV 9대(에코시티 4대, 만성지구 5대)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동시에, 인도와 자전거도로, 버스승강장 등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 후 견인처리하고, 교통 통행량이 많은 상가지역과 좁은 이면도로는 순회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구는 내년 1월 조성 완료 후 LH로부터 인수 예정인 만성호 근린공원과 만성 수변공원, 1·2호 어린이공원을 포함한 만성지구와 에코시티의 16개 공원에 대해서는 지속

적으로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기로 했다.

특히, 인수예정인 만성지구 내 공원 4개소에 대해서는 인수 전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에코시티와 만성지구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주정차 등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문제들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속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는 지정된 곳과 지정된 날에 배출하기, 주정차는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기, 현수막은 지정계시대를 활용하기 등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8년의 도피 생활 끝에 잡힌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이 1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피고인 대기실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최규호 전 전북도 교육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기자들의 질의를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뒀다.

지방선거 도내 선거사범 154명 기소

공소사호 만료... 검찰, 150명 불기소 흑색선거가 113명

전주시지검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308명을 입건, 이 중 154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거가 113명, 절차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전선거 69명, 불법선거 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총 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송 지사와 황 군수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송 지사는 지방선거 경선을 앞

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썬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새해 인사 문자메시지 40여 만건(900만원 상당)을 도민들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위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은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하고 선거공보에 이를 적시한 혐의(허위사실공표)를 받고 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이미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다만 이 군수는 최근 수년간 추석과 설 명절에 유권자 수백 명에게 2000여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전날 김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기소 기소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인사 행정에 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가 끝날 때마다 설문 조사를 한다.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고 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정읍 도박판 화제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도박판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화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피의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은 중과실 치사 등 혐의로 A모씨(60)와 B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5시 48분경 정읍시 신대인읍 한 주택에서 A모씨 등 4명은 도박을 하다가 A모씨와 B모씨가 몸싸움을 벌여 석유난로가 쓰러뜨려 불을 내 C모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 등 3명은 불을 피웠지만 C모씨는 미처 피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A모씨 등을 C모씨가 주택에 남아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올 동안이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A모씨 등 3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모씨 등은 "도박판에 들들날라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D모씨(59)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구속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화제를 일으킨 두 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인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산후우울증 검사하고 도움 받으세요"

전주시보건소, 산후 8주 이내 임신부 대상 산후우울 체크리스트 실시
우울위험군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주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전주시가 임신부의 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고 나섰다.

전주시보건소는 산후 8주 이내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산후우울 체크리스트 '에디버러 산후우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산후우울증은 주로 출산 후 4~6주 사이 시작되며 우울한 기분과 슬픔, 불쾌한 감정 변화, 불안정하고 예민함,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 후 10일~1년 이내 우울증 발생률은 평균 10~15%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가벼운 산후 우울감도 산모의 고통과 기능저하 등 사회심리적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자녀의 성장발달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산후 우울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예방접종 등을 위해 보건소를 찾는 임신부뿐만 아

니라,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등과 연계해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는 산후 8주 이내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는 보건소 또는 기관을 통해 산후우울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산후우울증의 선별검사 및 평가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자가 설문지는 에디버러 산후우울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다양한 질문들과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돼있다.

검사시에는 오늘 뿐만 아니라 지난 일주일 전체를 볼 때 감정을 어땠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문장에 체크하면 되며, 정답과 오답이 없어서 실제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응답하는 것이 정확한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보건소는 선별검사 결과 위험군이 발견될 경우에는 희망자에 한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맞춤형 개

발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앞서, 보건소는 올해 전주시 산후조리원 9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11개소와 연계해 지난 11월 말 기준으로 1,563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339명(22%)의 우울위험군을 발견했다.

또, 희망자 98명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개별상담 및 지속관리에 힘쓰고 있다.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은 "임산부들의 우울증을 예방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가 이뤄지도록 보건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이외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영양제지원 등 임신·출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효철 기자

영화와 함께하는 전주사회복지사대회 개최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서양열)는 12일 전주 조이앤시네마 영화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영화와 함께하는 전주사회복지사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시 사회복지사들은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하에 영화를 함

께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지역 복지 발전을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등을 최일선에서 돌보온 우수 사회복지사 11명에게 전주시장상(7명)과 전주시의회 의장상(2명), 협회장상(2명)이 각각 주

어졌다.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는 "전주시 사회복지사들은 사람이 존중받고 중심이 되는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한사람의 시민도 복지에서 소외받지 않는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도록 앞으로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주 효천지구 도로명주소 결정

효천중앙로 · 효천서로

신도시개발지구인 전주 효천지구 내 도로명주소가 효천중앙로와 효천서로 등으로 결정됐다.

전주시는 13일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주 효천지구에 입주할 시민들의 주민등록주소 등 공적주소의 기초가 될 도로명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안건은 도로명주소 부여 14건과 구간 변경 1건으로, 위원들은 효자동과 삼천동의 경계에 위치한 '효천(孝川)지구'라는 명칭이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만큼 노력했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도로명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의 변경 처리를 거쳐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 등록되며, 내비게이션과 다음지도, 네이버 지도 등 상용지도에 서비스 된다.

시는 해당구간에 도로 표지판과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100년 후 후손들에게 물려줄 도로명을 만들기 위해 바뀌지 않는 지명을 활용해 누구나 알 수 있고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덕진구,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 점검

내년 1월까지 관할 주민센터 대상

전주시 덕진구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센터 건물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덕진구는 공공건물 내 몰래카메라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덕진구 관할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장비 설치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확보, 방문인구가 많은 동부터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은 1차 육안검사를 통해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가 가능한 틈과 구멍은 메우고, 의심스러운 경우 탐지장비를 활용해확인하기로 했다.

불법촬영장치가 설치됐을 경우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사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한 만큼 각 동별로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과 경고문

을 배포·부착할 방침이다.

앞서, 덕진구는 지난 9월 덕진경찰서와 합동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덕진구청사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청사 내 여자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했으며 점검 결과 몰래카메라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경찰서의 불법촬영 예방 안전수칙에 따라 청사 내 화장실의 정기적인 불법촬영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흡이나 틈을 메워 설치공간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몰카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휴대전화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된다. 불법촬영장비 관련 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12 또는 1366번이다. /송효철 기자